

2023 코트라 경제논술 시험대비 시사자료

2023 미국 부채한도 협상 합의 주요 이슈

반도체 빼면 대중국 수출 이미 10년 전부터 줄고 있었다.

[중국 리오프닝에도, 시름 깊은 한국 경제]

중국, 전기차·조선까지 세계 1위…2차전지도 한국 추월

[중국 리오프닝에도, 시름 깊은 한국 경제]

◆ 2023 미국 부채한도 협상 합의 주요 이슈

부채한도란?

부채한도는 미 연방정부가 지출 의무 이행을 위해 재무부 채권 발행 등을 통해 빌릴 수 있는 한도로 1917년 법제화됐다. 기존에는 미 헌법에 의해 미 정부가 신규 부채를 발행할 때마다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했다. 부채 한도는 1960년 이래 78번 인상됐으며, 가장 최근의 인상은 2021년 12월로 당시 약 28조9000억 달러로 설정되었던 부채 한도를 31조4000억 달러로 인상하였다. 2001년 이래 미국 정부는 연평균 1조 달러에 육박하는 재정 적자를 겪고 있어 부채 한도의 정기적인 인상 없이는 지출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 외에는 덴마크가 부채한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2021년 기준 덴마크 중앙 정부 부채는 한도의 약 14% 정도로 미국 연방정부와 같이 정기적으로 부채한도를 인상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 호주는 2007년 부채 한도 제도를 도입하였고 미국처럼 재차 한도를 인상하며 제도를 운영한 바 있으나 2013년 12월 폐지하였다.

협상 결과

수차례의 영수 회담과 실무진 간의 물 밑 협상 끝에 현지 시간 5월 28일,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은 부채 한도 협상안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직후 공개된 부채 한도 인상 법안인 '2023 재정책임법(Fiscal Responsibility Act of 2023)'은 99페이지로 이뤄져 있으며,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채한도 적용을 2025년 1월 1일까지 약 2년간 유예하였다. 기존 공화당 주장에서 양보된 것으로, 이를 통해 다음 부채 한도 협상은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재무부의 특별 회계 조치도 2025년 초부터 다시 사용 가능할 전망이다. 단, 부채한도 인상의 반대 급부로 백악관과 민주당은 향후 2년간의 재량 지출의 삭감 및 인상폭 제한을 받아들여야 했다.

재량 지출 중 국방 예산은 바이든 대통령의 24년 예산안 수준인 8863억 달러로 설정되었다. 독극물 등 유해 물질에 노출된 전역 군인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 운영을 포함한 보훈 예산도 바이든 대통령의 요구안이 관철되었다. 하지만 국방 예산을 제외한 24 회계연도 재량 지출은 7037억 달러로 제한되었으며 25 회계연도의 총 재량 지출 증액은 24 회계연도에서 1%까지만 증액이 가능하다. 국방 및 보훈 예산을 제외한 재량지출 수준은 22 회계연도 수준으로 회귀하였으나 백악관은 IRS 예산 환수액 전용 등을 통해 23 회계연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공화당은 10년간 재량지출 인상폭을 적용코자 하였으나 2년간 제한한 후, 적정 재량 지출 한도를 권고하는 선에서 마무리 하였다.

기존 예산에서 환수도 진행될 예정이다. 코로나19 긴급 구호자금 미집행분 300억 달러와 작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포함되었던 IRS 확대 개편 예산 800억 달러 중 약 13억9000만 달러가 환수될 예정이다. 또한 800억 달러 중 200억 달러는 향후 2년간 전용돼 다른 재량지출에 투입될 예정이다. 공화당은 이번 회기 첫 법안으로 IRS 예산 편성 폐지를 결의할 정도로 IRS 확대 개편(및 그에 따른 증세)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단, 800억 달러는 10년간 편성되기로 했던 예산이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IRS 운영에 지장이 없으리라는 예측도 제기되었다.

민주당 강경파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상안에서 저소득층 대상 복지 프로그램의 의무 근로요건 강화가 포함되었다. 흔히 푸드 스탬프라고 불리는 저소득층 영양 보조프로그램(SNAP) 수혜를 위한 의무 근로대상자를 확대, 부양할 자녀가 없는 50-54세 사이의 성인을 포함시켰다. 기존에는 18-49세의 성인에게만 의무 근로

로요건이 적용되었다. 단, 전역군인이나 홈리스, 위탁보육 경험 성인 등에게는 적용 예외를 둘 예정이다. 또한 빈곤층 일시 부조제도(TANF)의 적용 산식을 변경해 주정부가 TANF에 투입할 예산이 감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외 공화당에서 주장하던 미국의 에너지 자립 차원에서 주장하던 화석 연료 개발 프로젝트 심의 절차 간소화가 반영됐으며, 현재 6월 30일까지 유예된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상환 유예조치도 추가 연장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연말 예산안 미통과에 의한 연방정부 셧다운 등을 방지하기 위해 12개 예산 법안이 기한 내 미통과될 경우에 대비한 페널티를 부여하였다. 의회 예산처는 이 법안을 통해 10년간 약 1조5000억 달러의 정부 부채가 감축될 것이라 추산하였다.

◆ 반도체 빼면 대중국 수출 이미 10년 전부터 줄고 있었다

[중국 리오프닝에도, 시름 깊은 한국 경제]

불과 4개월 새 13조원 가량 줄었다. 대(對)중국 무역수지는 지난해 말 12억 달러 흑자에서 올해 4월까지 -100억 달러로 적자로 돌아섰다. 대중 수출액은 11개월째 감소세다.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도 불구하고 주변, 교역국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건 ‘전 세계적 현상’이라고 하지만 유독 국내 기업들의 타격이 큰 이유는 뭘까.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사실 대중 수출액 감소는 근래 들어 일어난 일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진행돼 왔다”며 “그동안 이른바 ‘반도체 착시’로 보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제조 경쟁력 2035년 미국 추월”

반도체 착시는 반도체 수출액이 워낙 커 다른 분야의 수출액 감소가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실제 국내 기업의 대중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던 2013년과 지난해 반도체를 뺀 대중 수출액은 각각 1242억 달러와 1037억 달러였다. 반도체 때문에 증가하는 것처럼 보였던 대중 수출액은 반도체를 빼면 이미 10여 년 전부터 줄고 있었다는 얘기다. 이런 마당에 중국의 리오프닝이 내수시장에 한정되면서 주변국에 비해 한국의 피해가 더 커진 모양새다.

반도체를 뺀 대중 수출액은 왜 감소하고 있는 걸까.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원인으로 중국의 제조업 급성장을 꼽는다. 중국 정부는 2015년 ‘중국제조 2025’를 천명, 이른바 ‘제조 굴기(崛起)’에 나섰다. 중국제조 2025는 제조업 경쟁력을 2025년까지 독일·일본 수준으로 향상하고, 2035년에는 미국을 제치겠다는 계획이다. 수입에 의존하던 중간재마저 자체 생산해 자국 완결적 가치사슬을 형성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중국의 제조업은 기술력이 떨어져 한국이나 일본 등 교역국에 큰 위협이 되진 않았다. 오종혁 대외정책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중국 정부는 2009년부터 한국의 ‘소부장기업’ 육성정책과 비슷하게 강소기업 육성정책(1~5차)을 시행해왔는데, 강소기업 60%가 제조업체”라며 “중앙·지방 정부가 기술 개발 기업에 연구·개발(R&D) 보조금을 주거나 세액공제 혜택을 주면서 집중 육성해 왔다”고 말했다.

이 같은 중국의 제조 굴기는 미국과의 패권전쟁,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더욱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박승찬 중국경제연구소 소장은 “중국의 이러한 행보엔 국내 대순환(내수)을 핵심으로 국제 대순환(수출)을 성장시켜 미국 제재 등 대외 변수에 대한 대항력을 키우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게 자국 내 공급망 확충인데, 그러려면 제조업 기반을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가 어찌됐든 중국 정부의 지원 속에 중국의 제조업은 급성장하기 시작했다. 지난 10년간 중국 제조업 부가가치는 15조 위안 증가해 2021년에는 31조4000억 위안을 달성했다. 이는 세계 제조업 부가가치 중 30%에 이르는 수치다.

중국의 제조업경쟁력지수(CIP)는 일찌감치 한국을 추월한 바 있다. 한때 중국과 10단계 격차를 두고 앞서가던 한국은 2014년 중국에 밀려나 2021년 기준 3위에 머물러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대중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 기업의 40%가 ‘중국의 제조 기술력이 우리와 같거나 앞서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 같은 중국의 제조업은 한국 수출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지난해 1~9월 한국의 대중국 수출 상위 10개 품목 중 4개 품목(석유제품, 비누치약 및 화장품,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컴퓨터)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감소했다.

최근 공장을 내다 팔기로 한 A사도 중국 제조업체에 밀려났다. 이 회사 김진광(가명) 전무는 “2005~2010년 사이엔 한국이 중국보다 기술 우위였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며 “하지만 중국 중소기업체의 기술력이 좋아지면서 일감이 대폭 줄었다”고 말했다. 이상길 광학기기산업협회 운영위원장은 “한때 국내 기업

이 주도하던 스마트폰 렌즈 부품도 이미 중국의 크고 작은 제조업체에 주도권을 내줬다”며 “국내 대기업마저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중국산 제품을 찾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완성재가 아닌 중간재마저 ‘메이드인 차이나’에 치이고 있다는 얘기다.

다른 나라는 못 만드는 제품 만들어야

최근에는 중국경제가 내수 중심으로 급격히 방향을 튼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정부는 3년 전 ‘쌍순환 전략’을 꺼내들며 40년 만에 경제 엔진을 수출에서 내수로 틀었다. 지난 3월 양회에서 수출을 통한 ‘양적 성장’이 아닌, 내수 중심의 ‘질적 성장’을 강조하기도 했다. 중국의 산업 구조는 한국·일본 등지에서 품질 좋은 중간재를 수입해 완성재를 만들어 수출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경제 방향성을 내수로 돌리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대중 수출액이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설명이다. 그나마 수출 시장에서 반도체 비중이 커지면서 전체적으로는 수출액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중국인의 애국소비(귀차오)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인한 우회수출 비중 감소 등도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화장품 업계만 해도 귀차오 바람으로 설자리가 비좁아지고 있다. 중국의 대표 화장품 브랜드인 ‘퍼펙트 다이어리’를 보유한 이센, ‘화시즈’를 보유한 저장이거는 2020년 기준 전년 대비 성장률이 각각 52.5%, 78.2%를 기록한 반면 중국의 한국 화장품 수입 증가율은 2018년 64%에서 2020년 7.9%로 하락했다. 김문태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팀장은 “미·중 패권전쟁으로 대외관계가 악화하자 중국 업체들이 자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쓰겠다며 거래선을 끊어버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중국의 제조 굴기나 쌍순환전략, 귀차오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대중국 수출은 앞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미 대중수출 적자는 임계치를 지난 상황”이라며 “리오프닝 효과도 이전만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16일 장관 간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수출 유망품목 30개를 선정해 집중지원하고, 중국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대중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보험·신용보증 한도 확대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당장은 2차전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서 기술을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강내영 한국무역협회 선임연구원은 “저위·중위 기술 품목은 아세안, 인도와 같은 제3국으로의 수출 다변화가 필요하고,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2차전지와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은 기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가가치가 낮은 분야라도 전략적으로 필요한 기술은 정부가 인센티브를 통해 국내로 생산시설을 옮겨와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구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 연구원은 “그동안 여론의 관심이 2차전지나 반도체에 쏠려 있었는데, 이제는 독일이나 일본처럼 다른 나라는 만들지 못하는 것을 만드는 선진 산업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중국, 전기차·조선까지 세계 1위…2차전지도 한국 추월

[중국 리오프닝에도, 시름 깊은 한국 경제]

자동차, 조선, 철강, 섬유, 가전, 통신기기 등 전통적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은 이미 세계 최강 자리에 올라섰다. 자동차만 해도 중국은 올해 1분기 전통 강자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자동차 수출국 자리에 올랐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중국이 올해 1분기 자국에서 생산해 외국으로 수출한 자동차는 99만4000대로, 같은 기간 95만4000대를 수출한 기존 세계 1위 일본을 앞질렀다. 중국의 자동차 수출은 2021년 한국을 제쳤고, 지난해에는 독일까지 앞서며 세계 2위에 오른 바 있다.

중국 자동차는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독일·일본의 자동차를 베낀 ‘짝퉁’ 자동차로 불리며 해외에서 놀림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기차를 앞세워 가격 경쟁력과 성능까지 갖췄다는 평가가 늘고 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도입하면서 중국 자동차 견제에 나서고 있는데도 중국 자동차는 해외에서 잘 팔리는 것이다. 중국의 자동차 수출량은 2018년 100만대로 올라선 뒤 3년 만인 2021년 200만대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311만대를 기록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중국이 전기차를 집중 육성해 온 게 15~20년 전”이라며 “중국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는 것으로, 지금 분발하지 않으면 글로벌 전기차 기술 주도권이 중국으로 넘어갈지도 모른다”고 평가했다.

한국이 2000년대 초부터 줄곧 시장을 선도해 온 조선산업 역시 최근 중국이 세계 1위 자리에 올랐다. 한국은 2021년 1위 자리를 중국에 내줬고, 지난해에도 크게 밀렸다.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일부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선 여전히 한국이 우위를 지키고 있지만, 최근 들어선 그 격차마저 좁혀지고 있다. 한 자릿수였던 중국의 LNG선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30%까지 올라섰다. 이은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통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 1위가 된 건 중국 내 산업 규모 자체가 워낙 크고 지속적 기술 투자 등으로 산업 생태계가 이미 탄탄하게 형성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중국 증권시보에 따르면 중국을 넘어 세계 1위 전기차 배터리 업체로 성장한 CATL은 2021년에만 2차전지 관련 23건의 투자를 단행하면서 관련 생태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필요한 부품이나 기술을 한국·일본·독일에서 수입하는 게 아니라 직접 조달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같은 중국의 제조 굴기는 한국에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 한국 또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만큼 양국 간 산업 구조가 유사해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의 수출 구조 유사 정도를 측정해 경합 관계를 나타내는 대(對)수출 경합도지수(ESI)는 2011년 0.347에서 2021년 말 0.390으로 0.043포인트 상승했다.

이 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양국 수출 구조가 유사해 해당 시장에서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뜻한다. 화학, 일반기계, 자동차, 전기·기계 등이 속한 중고위기술산업 분야에서의 양국 간 수출경합도지수는 같은 기간 0.347에서 0.390으로 0.043포인트 상승했다. 항공우주, 의약품, 컴퓨터·사무용기기, 전자통신 등을 아우르는 첨단기술산업도 비슷한 수준이다. 조의운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한·중 양국의 수출 경쟁이 전 세계, 제3국 시장에서 모두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한국이 기술에서 앞선다는 것도 옛말이다. 교역국과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무역특화지수’ 분석에서도 최근 10년 새 중고위·첨단기술산업에서 ‘상대적 경쟁 우위’를 점했던 한국의 지위는 ‘경합’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승찬 중국경영연구소 소장은 “앞으로는 한·중 경제구조가 비슷해지면서 지금보다 더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며 “새로운 한·중 산업협력 구조를 모색하지 않으면 대중 수출 적자를 넘어 제3국 시장, 중간재에서도 ‘메이드 인 차이나’에 밀리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2차전지 등 '5대 신성장(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 전기차, 2차전지,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에서는 중국에 이미 크게 밀리고 있다. 2016년 이후 5년간 중국의 5대 신산업 수출점유율은 1.6%포인트 확대된 반면, 한국은 0.1%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따라 양국 간 수출점유율 격차는 2016년 6.4%포인트에서 2021년 8.1%포인트로 확대됐다. CATL의 지난해 세계 판매 실적은 출하량 기준 270GWh(기가와트시)로 시장 점유율은 39.1%에 이른다(SNE리서치 조사).

CATL의 뒤를 이어 2위를 기록한 LG에너지솔루션의 출하량과 점유율은 각각 103GWh, 14.9%. 중국 1위 기업과 한국 1위 기업 간 격차가 두 배 이상으로 벌어진 것이다. 조은교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기술적으로는 한국이 중국을 앞서고 있지만 이마저도 기술 격차가 2년 안팎으로 좁혀졌다”며 “경기적 요인이 크지만 중국의 제조업 기술이 고도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중국의 제조굴기로 인해 대부분 제조업종에서 한국의 대중수출은 시간차를 두고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